

교 육 학 논 술

일시	2014. 11. 03 (월) 10주차 2014. 11. 10 (월) 11주차	장소	인0133
학습 내용	모의 CNU 토론대회 주제1. 동성 결혼 법적 허용, 해야 하나? 주제2.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실행해야 하나?		

토론대회 참여를 위해 토론을 실제와 동일하게 실시함

1. 토론대회 숙지

1. 긍정측 ① 기조발언	3	
2. 부정측 ① "	3	
3. 부정측 ② 교차조사	3	
4. 긍정측 ② "	3	
5. (자유토론)	15 (16강 생략)	
6. 숙의시간	3	
7. 긍정측 ③ 교차조사	3	
8. 부정측 ③ "	3	
9. (자유토론)	15	
10. 부정측 ④ 마무리 발언	2	
11. 긍정측 ④ "	2	

[16강 : 40분
8강 ~ : 55분]

16강전 진행순서			
정해진 자리에서	1. 긍정측 기조발언 (3분)	긍정 15원자	1. 팀별 토론준비 09:05 ~ 09:45 (30분)
"	2. 부정측 기조발언 (3분)	부정 15원자	2. 1차 토론 실시 09:45 ~ 10:25 (40분)
" (마중본리)	3. 부정측 교차조사 (3분)	부정 25원자 (주제1)	3. 2차 토론 실시 10:50 ~ 11:30 (40분)
"	4. 긍정측 교차조사 (3분)	긍정 25원자 (주제1)	4. 정리 11:30 ~ 11:45 (15분)
앞줄 자리에	5. 숙의시간 (3분)	팀별 논의	
정해진 자리에서 (마중본리)	6. 긍정측 교차조사 (3분)	자유선택 주제 지정	
"	7. 부정측 교차조사 (3분)	"	
앞줄 자리에	8. 자유토론 (15분)		
앞줄 자리에서 (마중본리)	9. 부정측 마무리 발언 (2분)	부정 35원자	
"	10. 긍정측 마무리 발언 (2분)	긍정 35원자	

- 완성된 문장 ~ 다나카 (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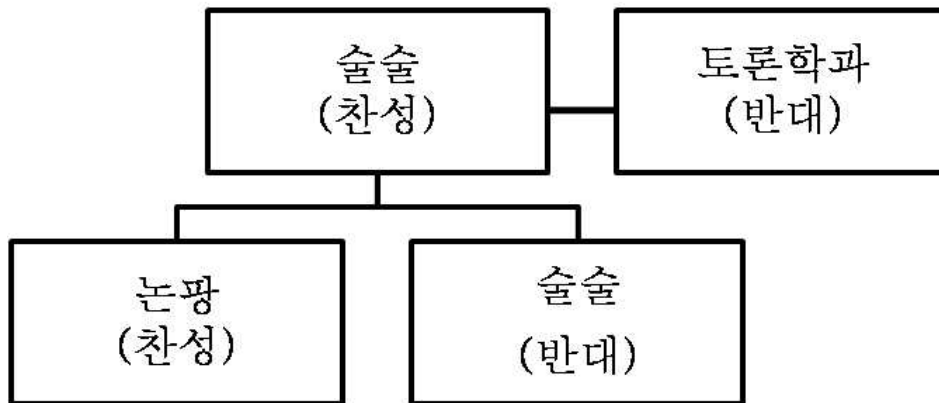
- 팀원간 대화 금지 - 중재

- 같은 내용 중복 지양 - 복장 (준비된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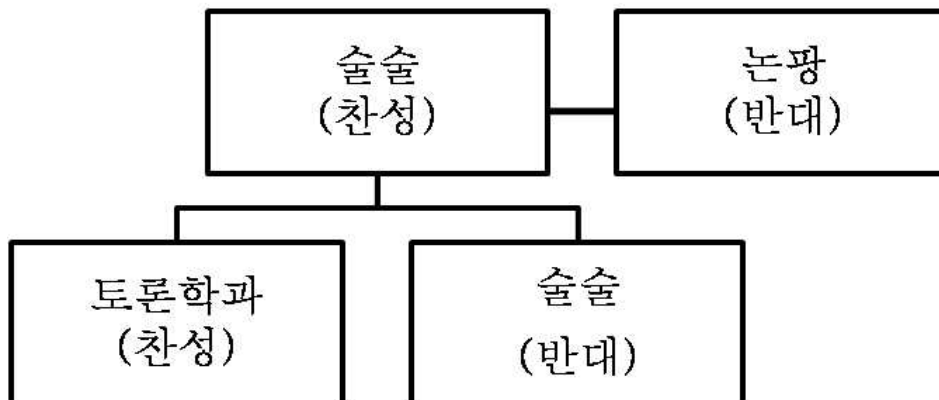
- 긍정 부정 확실함

2. 모의 토론대회 대진표

주제1. 동성 결혼 법적 허용, 해야 하나?



주제2. 문·이과 통합형 교육, 실행해야 하나?









<부록> 토론대회 참가신청서

논평

제 1주제 : 동성 결혼의 법적 허용, 해야 하나?

찬성 : 법적 허용, 해야 한다	○	입장 택 1
반대 : 법적 허용, 하지 말아야 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인간의 자유권과 평등권 그리고 행복권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들의 인권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 중에서도 동성결혼의 합법화 여부가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현재 인권위원회와 여러 인권단체들의 노력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고, 우리나라도 동성애자들의 자유권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측의 주된 주장은 동성결혼은 결혼을 통한 개체보존 및 번식의 중요성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체의 보존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것은 종족의 번식과 유지가 최고 가치가 되었던 과거 부족사회 문화의 잔재일 뿐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독신주의자들 뿐 아니라 아이 갖기를 원치 않는 부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부부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결혼만이 번식의 중요성을 무시한다고 볼 수 없다. 또, 반대 측은 동성부부는 가족과 민족의 혈통을 보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가족의 개념은 당사자들의 관계와 기 기능에 주목하여 변화하고 있다. 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20대 독신가족, 노인 단독 가구 및 비혈연 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부부를 중심으로 자녀를 포함한 구성원만을 가족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가족의 의미와 범위가 넓어지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동성애자 부부는 가족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대측은 동성 부모 사이에서 자란 아이들이 두 명의 아빠 혹은 엄마를 가져 가치관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빠 혹은 엄마의 부재로 인한 혼란은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도 겪고 있는 현상으로 동성애자 가족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또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문제는 양육자 한 명이기에 때문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동성 부부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양육을 충실히 해나간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성애자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 수 있듯이, 동성애자들도 또한 사랑하는 동성과 결혼할 권리가 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의 결혼을 금지하지 않듯이 동성애자들의 결혼도 금지될 이유가 없다. 그들의 행복을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행복추구권과 자유권 그리고 평등권에 위배된다. 결혼은 사회문화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그 형태가 변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허용되었던 일부다처제가 현재 금지되었듯이, 동성결혼 또한 시대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현상이다. 여러 선진국들도 이미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국가들은 총 14개 국으로,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벨기에, 스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등이 있고 미국에서는 총 24개 주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거부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다.

연구에 따르면 전 인구의 70~80%가 양성애 기질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사회가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욕구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동성애는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할 것이다.

제 2주제 :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시행해야 하나?

찬성 : 시행해야 한다.		입장 태 1
반대 :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	

인문학과 과학은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미 인문학에는 수학과 과학이, 과학에는 인문학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교육부는 인문학과 과학을 통합하여 교육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문·이과 통합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이과 통합교육을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이 가능한지는 더 생각해 봐야 하고 이 정책의 실효성에는 많은 의문이 따른다.

첫째,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 인재 양성에 문·이과 통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학생들이 사람과 과학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배우면 그런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된다는 막연한 인식이며 많은 과목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기초지식만을 배우는 수박 겉핥기식의 교육이다. 또한 고교 과정에서 공통필수의 지나친 강화는 개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인재 양성을 위한 수학이나 탐구과목은 통합교육보다는 수준별 세분화를 통해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학생을 창의적인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개정 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교육개정은 학생을 위한 교육개정일 뿐, 인재를 양성하는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교육개정이기 에 많은 우려가 뒤따른다.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문·이과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문·이과 통합교육 정책은 정책전문가와 각 학문의 전문가들이 모여 만들어진 뒤 교사들에게 하향전달 된다. 이는 실제 교육 현장을 반영하지 못했고, 민주적 절차성이 결여된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에 교사를 적극 참여시켰을 때, 교사의 수업에 대한 열의와 열정, 책무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교사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수업에서의 전문성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많은 혼란만 줄 것이다. 현 교육부의 교육개정 추진 일정에 따르면 교육과정 개발을 내년 5월에 마치기로 되어있다. 하지만 이런 방대한 교육과정을 1년 반 만에 해내겠다는 것은 졸속개정의 우려가 있으며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해외의 사례 등을 살펴보았을 때 1년이라는 기간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또한 이러한 잦은 개정은 정권의 교체와 동반되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과 일치성이 부족하며 5년이 지나면 다시 바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정책을 따르는 척 하는 것이 교사들의 생존 전략이 될 뿐이다.

문·이과 통합교육은 내년 5월에 개발을 마치며, 2021학년도 수능에 반영하기로 확정된 정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크다. 문·이과 통합과 창의 융합 인재 양성과의 관계가 불명확하고,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교육정책은 교사의 책무성 결여와 관계되어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잦은 교육과정의 개정은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교육개혁은 교육 이해당사자들이 교육개혁의 취지와 목표를 잘 이해하고 교육개혁 방안을 실천하려는 의자가 강할 때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이러한 정책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며, 실행에 있어 얼마나 기대하는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제 1주제 : 동성 결혼의 법적 허용, 해야 하나?

찬성 : 법적 허용, 해야 한다		입 장 택 1
반대 : 법적 허용, 하지 말아야 한다.	○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동성애를 숨기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드러내고, 동성 결혼의 법적 인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2001년, 네덜란드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는 점점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1호 커밍아웃 연예인 홍석천 씨는 입양한 조카들이 겪을 사회적 시선과 차별을 염려해 아이들의 외국유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연 우리나라의 동성결혼 법제화가 올바른 일일까?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찬성하는 측은 첫째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에 따라 동성애자들도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결혼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개개인의 결혼 선택을 국가가 비도덕, 비윤리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 동성 결혼 법적 허용이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국내 호주제폐지와 성별 정정과 같은 사례는 우려와는 달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첫째, 동성부부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그들 자녀의 인권을 침해한다. 가정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건강한 사회적 일원으로 양육하는 사회적 기관이다. 그런데 동성부부에게서 양육된 아이들이 올바른 성 정체성을 확립하고, 건강한 사회적 일원으로 자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실제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레즈비언 부모의 밑에서 자란 한 소년이 부모와는 다른 자신의 남성성에 혐오감을 느껴 결국에는 성 전환 수술을 택한 사례가 발생했다. 더욱이 동성의 양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때 그 미성숙한 아이가 받게 되는 정신적 충격은 어떻게 보호하고 책임질 것이며, 이런 아이들의 침해된 권리는 누가 보호해 줄 것인가?

둘째, 전통적인 결혼의 의미와 기능을 바꾸는 것은 큰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 결혼의 전통적인 통념은 일남일녀의 결합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통념은 근친상간이나 일부다처제와 같은 결혼의 형태를 막는 논리적인 근거와 기준이 되어왔다. 그러나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기존 결혼의 기준을 무너뜨린다.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결혼을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동성애자들의 말처럼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일처다부제나, 집단 결혼과 같은 형태도 합법화 되고,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건강한 가정과 결혼의 제도를 붕괴시키고, 국가의 공공질서와 공공복지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모든 자유에는 제한이 있고, 이 제한은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법은 이러한 기준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개인은 법으로 규정한 제한이나 한계를 두고 자유를 누릴 때, 사회에 혼란이나 혼동을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찬성 측이 주장하듯 개인의 자유 행복권 추구라는 명분으로 이 제한이나 한계를 깨뜨린다면, 동성 부모를 둔 아이의 성 정체성 혼란이 야기되고 차별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된다. 또한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와 기준으로 작용했던 전통적인 결혼붕괴는 우리 사회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동성애자들의 행복 추구를 위한 동성결혼의 합법이 가져올 결과가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제 2주제 :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시행해야 하나?

찬성 : 시행해야 한다.		입장 택 1
반대 :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	

2014년 9월, 교육부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주요사항 총론’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취지라고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은 소프트웨어교육과 안전교육 및 고등학교에서의 문·이과 분리체계 폐지이다. 따라서 모든 고등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총 6과목을 필수로 학습하게 된다. 또한 합창과 합주 등이 포함된 진로심화와 실험과 탐구 등의 과목도 신설된다.

이처럼 다양한 과목의 추가가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측의 의견이다. 그러나 정작 현장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보다 혼란과 부담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교육과정이 개정된다는 사실부터 학교에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전면개정과 부분개정만 14번 있었을 정도로 한국의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자주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빈번히 개편되는 교육과정에 학생들과 교사는 피로감을 느끼고, 학습과 수업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또한 늘어난 과목들이 학생들의 사고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업의 부담이 크게 더해진 상황이다. 학생의 발달은 학생 당사자가 모든 과목을 충실히 학습하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결과이다. 오히려 지나친 학업부담으로 학생이 버티지 못하고 몇 과목을 포기해버리거나 성실히 배우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생의 성장보다는 부담감과 스트레스만 과중된 상태가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찬성측은 미국, 영국, 핀란드 등의 사례를 들며 선진국의 문·이과가 통합체계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제도, 행정, 분위기 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선진국들의 제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은 검정교과서가 없고 학생의 교과선택권이 많으며 평가제도 역시 다르다. 하지만 한국은 문·이과가 통합될 경우, 교과서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며, 해당 교육과정에 맞춰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임용제도도 수정해야 한다. 또한 각종 대입제도 역시 개정해야 하며, 교육과정에서도 과목과 이수시간 외의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어떠한 것도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다. 따라서 제도적·행정적 차원에서 당장 바뀐 교육과정을 받아들이기엔 시기상조임에 틀림없다. 핀란드의 A·B 분리형 대학입학시험 제도를 도입했다가 1년만에 폐지한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취업률과 진학률이 이과가 훨씬 높기 때문에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문·이과 통합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문과와 이과의 대학정원은 거의 같지만 문과 수험생이 10만명 이상 더 많으며, 취업률은 최대 23.6%까지 차이가 난다. 그러나 문·이과를 통합하여 단순히 취업률과 진학률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배우면 폭 넓게 배울 수 있지만 심화학습의 기회는 줄어 그만큼 깊이가 떨어지는 교육이 될 수 있다. 문과와 이과의 심화과정이 학습되지 못한 채 진학하게 되면 결국 대학이 누락된 교육을 담당하여 대학심화과정 또한 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직업의 전문성의 약화라는 결과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처럼 융합과 통섭의 사고를 강조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고자 만든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의 취지는 좋으나, 성급한 결정으로 준비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교과를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한다 할지라도 실제 창의융합형 인재로 육성될 수 있는지, 혹은 단순히 교과목들만 추가한 것인지 그 실효성에도 의문을 가져야 한다.

제 1주제 : 동성 결혼의 법적 허용, 해야 하나?

찬성 : 법적 허용, 해야 한다		입장 택 1
반대 : 법적 허용, 하지 말아야 한다.	○	

최근 박원순 서울 시장의 동성 결혼 합법화 관련 발언으로 인해 관련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더 이상 동성애는 죄도 아니고 치료되어야 하는 병이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간주된다. 이미 세계적으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나라도 있고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추진하려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2010년 세계 LGBT인권연합단체에서 OECD 국가의 만20세 이상의 국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동성애 결혼 허용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12.3%, 동성애 가족의 입양을 허용해도 된다는 의견이 6.9% OECD 국가들 중에서 동성 결혼의 허용에 대한 인식은 최하위권이다. 그리고 이미 동성 결혼 합법화 된 나라인 프랑스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났고, 미국에서 또한 동성 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다. 이처럼 아직 동성 커플 법적 호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대다수인 우리나라에서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허용한다면 앞서 언급한 나라들처럼 사회의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회적 질서와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동성 결혼의 법적 허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복추구권에 대하여 역설하지만, 동성 부부의 입양된 자녀에 대한 권리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입양된 자녀가 겪을 사회의 편견과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입양된 아이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그들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동성 부부와 입양된 아이들 간의 관계에서 약자는 그들의 자녀이다. 동성 부부의 권리를 위해 약자인 그들의 자녀가 행복할 권리를 박탈할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그리고 1994년 가족의 해에 UN의 '가족의 원리 안내'라는 공식 문서에 명시된 '가족을 문화적 다양성, 상대성, 가변성 등으로 정의 내릴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가족의 개념이 더 이상 불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대변한다. 시대가 지나면서 오늘날 가족의 정의가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족이 더 이상 재생산과 양육의 개념보다 정서적인 유대와 사랑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인류공동체가 유지되는 근원적이고 최소한의 단위인 가족의 붕괴를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한 나라인 스페인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1년 동안 4,500쌍의 동성 부부 중 실제 자녀를 입양한 부부는 단 한 쌍도 없었다고 한다. 이는 자녀 입양에 대한 권리가 동성 부부에게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근거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성 결혼 합법화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에는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장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 대신 자녀 입양의 권리를 제외한 모든 반려자로서의 법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시민 결합을 제시하는 바이다.

제 2주제 :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시행해야 하나?

찬성 : 시행해야 한다.	○	입장 택 1
반대 :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통합의 시대’ ‘융합의 시대’ ‘다양성의 시대’ 현대사회를 지칭하는 말들은 무수히 많다. 통합, 융합은 교육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어느 학문이든 간에, 다른 학문의 도움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학문은 없다. 사회학, 경제학, 물리학, 생물학 등 여러 분야로 나뉘어있지만 각각의 이론과 용어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문, 이과 구분 없이 주요 과목을 공통으로 학습한 뒤 선택과목을 통해 심화된 내용을 배울 수 있게 개편하였다.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공통 사회, 한국사, 통합 과학, 과학 탐구 실험 총 7과목으로 구성되어있다.

문·이과 통합 교육을 실시하면 적성에 대한 개인의 시간과 폭을 늘릴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학생들은 고교 때 단지 입시에 유리하기 위해 스스로의 능력을 문과 또는 이과로 성급히 단정했다. 이는 추후 잘못됐다고 판단되더라도 계열을 변경해 되돌리는 것이 입시에 너무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취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심지어 자신은 문과적인 능력이 더 뛰어난데도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이과를 선택했지만 대학에 가서 전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통합 교육을 실시하면 고교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대학 입학 후 실제 학과과정을 통해 해당 과목을 깊게 탐구하여 자신에게 진정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문·이과 통합 교육을 통해 통합형 인재 육성에 본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위대한 과학자이자, 예술가이며 공학자였다. 미켈란젤로 역시 위대한 예술가인 동시에 엔지니어였다. 이처럼 과학자에게는 인문학적 소양이, 경영자에게는 자연과학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통합적 사고를 통해 양쪽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때이다. 기존의 교육과정은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슬로건만 내세웠을 뿐 적합한 교육 방안이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통해서 문과 이과 구분 없이 학생 모두가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과목을 배워, 교과 편식 없이 고르게 공부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의 융합 인재에 걸 맞는 통합적 사고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대학생 전문 연구기관인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의 ‘2014년도 대한민국 대학생 역사 인식 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39.2%가 6.25 한국전쟁의 발발연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문에서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분법적 구분은 인식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전공에 관계없이 학문의 기초를 다지는데 큰 비중을 두고 다른 학문 분야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기본적 사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당장 우리나라에서 문·이과 통합형 교육을 실시하기엔 수시로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현장에서의 혼란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번 문·이과 통합형 교육은 적용시기가 이르다는 반발을 받아들여, 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부터 적용통합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이 언젠가는 도달해야 할 목표이다. 이룩해야 할 일에 대해서 차일피일 미뤄서는 발전이 없을 것이다. 부족하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금씩 바뀌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